

대전 공공배달앱 도입 결국 보류

배민 수수료 사태로 탄력 받았지만 여론 가라앉자 도입 검토 소강상태 선행 지자체 운영비 문제로 골머리 시 배달앱 개발 사실상 무기한 연기

〈속보〉=대전의 '공공배달앱' 도입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양상이다. 국내 배달시장을 거의 독식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배민)'이 수수료 체계 개편 문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공공배달앱의 존재 가치가 부각됐을 때까지만 해도 시는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듯했지만 여론이 가라앉으면서 공공배달앱 도입 논의도 소강상태를 맞고 있다.

〈본보 4월 9일자 1면 등 보도〉 국내 배달 앱의 큰 손인 배민의 수수료 체계 개편 사태로 전국 지자체는 전북 군산 등이 도입한 공공배달앱에 주목했다. 대전시의 경우 지역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배민 사태가 터지기 전인 지난 1월부터 공공배달앱 출시 계획을 검토했다. 그러나 5개월이 넘도록 시 공공배달앱 도입 진척도는 여전히 '검토단

계'에 머물러 있다. 공공배달앱 운용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분석들이 속속 감지되고 있어서다.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은데 이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라는 공적 영역에서 명분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배달앱 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재정지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향후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위탁운영을 한다 해도 획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이 전제되지 않으면 '수수료 0%' 유지를 위한 시 재정 지원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제는 역시 사업성과 지속적인 투자 여부다. 앱 개발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운영권을 주면 앱 개발은 무료로 해주겠다는 업체도 상당수다.

결국 운영비가 문제인데 시는 대전이라는 광역자치단체 규모에서 배달앱을 운영할 경우 장기적으로 매년 최소 10억 원 정도를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시민 공감대를 감안하면 시 재정 규모상 무리도 아닌데 민간기업과의 경쟁 속에서 재정 지원이 갈수록 커지면 공공배달앱은 '돈 먹는 하마'로 인식돼 사업 자체가



유채꽃 사이로 28일 대전 유성구 갑천변에 핀 유채꽃 사이로 시민들이 걷고 있다.

함형서 기자 foodwork23@ggilbo.com

존폐기토에 설 수도 있다. 배민 등과 경쟁해 살아남으려면, 다시 말해 가맹업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주기적으로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마케팅(이벤트)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최소 수 천만 원에서 수 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예측 가능한 운영비용을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예

기다. 현재 공공배달앱을 운영 중인 한 지자체도 대형업체로부터 추가 사업비 요청을 받고 있는 등 앱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배달앱 도입을 검토해 온 시는 앱 개발·운영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타 지자체의 운영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뒤 조심스럽게 결정하겠다는 거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온통대전'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확산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공공배달앱은 뚜렷한 모범사례가 없고 대부분 시행 초기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타 지자체 배달앱이 원활하게 운영될 경우 이를 벤치마킹해 사업 추진에 다시 시동을 걸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

“불안해서...” 일부 유·초등 미등교 선택

무증상자, 발열 체크로 못 찾아 지역 감염 확산에 등교일 조정

유치원, 초등 1·2학년, 중3도 등교수업 대열에 합류한 가운데 일부 원아와 학생들이 등원·등교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지역 확진자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무증상자의 경우 자가진단과 발열 체크 등의 기초적인 진단만으론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이 지난 27일 격정과 우려 속에 86일 만에 학교에 발을 들였다. 가정 내 돌봄 부담, 저학년 기초학력 학습 공백, 온라인 원격수업 한계 등의 문제로 고학년들보다 우선 등교가 실시된 것인데 여전히 현장은 우려가 큰 분위기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이어 쿠팡 물류창고 집단감염 등 예기치 못한 지역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 특수학교 838곳이 등교수업일을 조정하거나 원격·등교수업을 병행하기로 하면서다. 충청권에서는 충남 천안 18곳, 아산 10곳 등이 등교를 연기하거나 수업 방식

을 변경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등교수업을 시작해야 하는 탓에 일부 가정에서는 교외체험학습을 선택했다.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교외체험학습을 선택한 유아들을 '기타 미등원 유아'로 분류하고, 최장 30일까지 미등원과 미등교를 허용하고 있다. 28일 대전을 제외한 충청권 3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 미등교 원아·학생 현황'에 따르면 ▲세종은 유치원 17.5%, 초등학교 13.1% ▲충남은 유치원 16%, 초등학교 6.9% ▲충북은 유치원 7.4%, 초등학교 14.7%가 등교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등교를 하지 않은 모든 학생들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미등교한 것은 아니다"라며 "자가진단 및 발열검사서 등등교 중지 판정을 받은 아이들을 포함해 일부 초등학생들의 경우 학부모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학교를 보내지 않고 체험학습을 선택한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비말 감염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이라며 "이상 증상이 없

라도 해외 입국자나 감염 관련 국가를 다녀온 학생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선 마스크 착용 외에는 방역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불안감이 표출되고 있다. 만약 감염 위험에 노출된 학생이 등교했을 경우 등하교 때와 점심시간을 활용해 발열 체크를 하고 가정에서 자가진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해당 학교로선 적절한 대비가 어려워져서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지면안내

- ▶7면 교통사고 가해자 부담금 가중된다
- ▶13면 의병의 날 행사 흥성서 개최

▶10면 [인터뷰] 이승한 대전체육회장

역대 최저 기준금리 0.5% 경기 부양 성공할까

충청권 제조·서비스업 투자 부담 완화

한국은행이 지난 3월 16일 '빅컷(1.25→0.75%)'을 단행해 사상 첫 기준금리 0%대 시대가 열렸지만 2개월 만에 다시 0.25%포인트 더 낮춰 0.5%로 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양 차원의 결정으로, 시장은 일단 환영하고 있으나 충청권 지방정부의 조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9면

이번 금리 인하는 사전에 예고된 것과 진배없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각국의 수출 타격과 경제성장률 지표가 하락하면서 각 정부가 자국의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금리 인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어서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 3월부터 기준금리를 0~0.25%로 단계적 인하한 바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코로나의 세계적 확산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물가 상승률도 큰 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며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하며 국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권 경제학계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

고 있다.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금융권, 제조·서비스업을 분간할 것 없이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경제 전반에 대한 경기 부양과 투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금리 인하 결정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워낙 소비와 투자 수요가 없어 물가와 부동산 투기가 상승하는 전통적인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제조·서비스업의 경우 대출을 통해 공장과 시설 투자를 했을 경우 이자 감면 효과가 발생하고 이로써 도산 확률이 낮아져 고용유지 여력이 확보되는 긍정적 효과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다만 3차 추경을 통한 정부의 선별적 재정 정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취약 산업·계층을 보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 교수는 "아무리 금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내려갔지만 자금이 제한적이라서 돈을 빌리지 못해 도산하는 사례가 어찌 됐든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재정 정책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지역기업과 지역민이 도산하지 않도록 충청권 지방정부가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훈수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대전을 살리는 시민의 힘!!

온통대전

대전지역화폐

01

온통대전 앱 다운로드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 앱스토어(아이폰)

02

회원가입 후 카드신청

03

금액충전

04

대전지역내에서 일반 체크카드처럼 사용
※ 삼성페이·LG페이 탑재가능

온통대전
대전광역시

온통대전이란?
대전광역시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충전식 카드형 지역화폐로 온통대전으로 결제하실 때마다 **최대 15%의 캐시백**을 드리고 ▶출시일로부터 2개월까지(예산소진시 조기종료)
연말정산 시 최대 80% 소득공제(7월까지)가 가능합니다.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